

self-interest as a normative characterization of rational behaviour and to act accordingly(Stefano Zamagni, ed., 1995, 'The Economics of Altruism')

이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경제학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더욱 증진된다고 보고한 심리학 연구결과로 볼 때도 그러하다. 경제학 과목을 통하여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함과 정의와 사랑의 가치관이 증진 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기독교 경제학의 교육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랑과 정의, 선함의 경제학이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실현되어져 공의가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경제학에서의 개인 이익추구라는 인간관과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관과 경제행동 모형에 대한 신제도주의 학파와 경제사회학과,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인간적 경제에 대한 사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경제학이 취해야 할 경제학 인간모형과 사회학과의 연계, 방법론을 고민해 보고 현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해보고자 한다.

경제/05/발표논문/

가치(Value)와 가격(Price) - 기독교적 관점에서

김유신, 이대식 (부산대 교수)

1. 가치와 가격 논의의 필요성

로빈슨은 “가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형이상학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고 정시키려는 어떤 것을 찾으려 하면 단지 단어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J. Robinson, 26) 라고 한다. 이 말이 옳다면 가치는 이미 경제학에서 가격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개념이 된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하면, 정상적인 자유 시장 경제(완전경쟁)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한계효용과 일치하고, 임금은 한계생산력과 일치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균형점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가격, 부당한 임금은 있을 수가 없다. 상품의 가격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고, 임금은 노동이 상품인 한에서는 한계생산 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당할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이 한계 생산력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 면, 노동력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든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착취란 것은 없는 셈이다. 상품의 가치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떠한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이 비싸서 생활하기 힘들고 임금이 적어서 살기가 힘들어 자살하는가 하면 고통 속에 있다. 즉 한 쪽에서는 재물이 넘쳐나 낭비와 허례로 치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격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에서는 초기자원을 인정하면 현재의 가격의 집합은 추상화된 현실에서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의 틀인 공리주의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추상화도니 현실에서조차도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만약 부자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10%만 고통 받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들의 행복은 많이 증진되고 부자의 행복은 조금 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체계를 통한 소득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회정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정의는 주류 경제학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다르다. 윤리와 정의 인간의 고통 불평등을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학이 human science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경제 이론적 답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도 경제학, 후생경제학, 진화경제학 등이 있지만, 그 답변에는 윤리가 들어가지 않으니, 여전히 고통, 빈곤이란 개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경제외적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리카르도, 마르크스의 전통에서 보이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을 통한 잉여가치는 노동자에게 가야한다는 사상이다. 물론 이 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불명확한 경계를 인정하고, 노동의 질의 다양성, , 이미 비록 노동의 질이 다양하고, 자본의 위험성, 저축에 의한 자본의 축적이 있어 노동과 자본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노동

가치를 핵심에 두고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은 이러한 사상은 소수에게만 받아들여 지지만, 그것이 지니는 도덕적 정신은 매우 강하다. 그러나 이 사상은 문제의 지나친 단순화 이고, 해결 방식에 대한 접근에서도 창조적 사고 가능성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주류 경제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틀 속에서 찾자 애쓰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너무 현실 적응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상품의 교환 가격은 그 상품이 지니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상품과 노동의 본래적 가치를 반영 못하는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된다면, 이것은 시장은 그 작동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완전한 시장으로 시장 개념이 전제하는 조건들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혹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장의 작동자체에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 이 때 가치는 노동에만 있지 않고 다양하다.

여기서는 세 번째 시각을 취하려 한다. 이러한 시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측정할 수 없는 형이상학 개념으로 무용한 개념이라는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가치는 비록 형이상학적 개념이 될 수 있으나, 이 형이상학적 개념은 항상 현실과 관련이 있고, 이 관점은 현실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언제든 가능하게 하여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것이다. 칸트의 용어를 빌리면 초월적 개념인 셈이다. 즉 현실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현실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개념이다. 수학에서 무한대와 같이.⁹⁵⁾

가치에 대한 논의는 우리를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 초월적으로 현실을 보는 입지를 갖게 해주므로 창의성과 윤리성에 대한 동기를 일으킨다. 이 관점이 기독교적 관점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윤리성을 간직해야 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류경제학에서 대접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자유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 가격이 과연 정의롭고 정당한 가격인지를 살펴보려는 서설 중에 서설이다. 경제현상이 과학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언제든 지 규범성이 그 조건으로 작용을 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가치개념이다. 가치의 본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논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가치를 논구하기 위한 서설 중에 서설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원시 목가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환의 본성을 이야기 하는 아담스미스의 자연가치와 자연가격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로 시장의 한계와 전제를 아담스미스의 보편도덕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시장경제 개념이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실증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규범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논 의 하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제시하려 한다.

2. 자연 가치와 자연가격: 아담 스미스

아담스미스에 의하면, "가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때때로 어떤 특정한

95) 무한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도 원자론 때문에 무한히 나눌 수 없고, 공간도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의하면 우주는 유한하다. 따라서 무한대는 아무 곳에서도 없다. 그러나 무한대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수학에서 널리 사용된다. 괴델은 이것을 초월적 개념(transcendental) 이라고 부른다.

대상의 효용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다른 상품의 구매력으로, 즉 그 대상의 소유가 운반하는(convey) 구매력으로 표현된다. 전자는 "사용가치"(value in use)이고 후자는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이다. 사용가치가 매우 큰 물건이 교환가치는 거의 적거나 혹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교환가치에서는 매우 큰 물건이 사용가치는 거의 적거나 전연 없는 경우가 많다. 물보다 유용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거의 아무 것도 구입하지 못한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는 매우 적지만, 그것과 교환으로 많은 물건을 가질 수 있다."(Adam Smith, 국부론 김수행 번역 originally Wealth of Nations(Everyman edition, vol I, pp.24-5)

여기서 가치란 명백히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연적 사건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러한 시장가격은 아니다. 그렇다고 변동하는 현실적 가격의 평균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인가? 아담스미스는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appropriation)가 이루어지기 전의 초기의 원시 상태를 가정하고, 거기에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 비율은 무엇이겠는가를 묻는다. 그는 그러한 상태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량 사이의 비율이 그 대상들을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인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는 예를 들어 비버(beaver)를 죽이는데 드는 노동은 노루를 죽이는 것보다 두 배의 노동이 든다면, 하나의 비버는 두 마리의 노루와 교환될 것이다. 이들의 노동 혹은 두 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생산품은 하루의 노동 혹은 1시간의 노동보다 두 배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생산은 노동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혹은 획득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는 노동량이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교환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을 규정하는 유일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한다.(Adam Smith, wealth of nations vol. I pp. 41-2, 재인용 in J. Robinson 27)

물론 아담 스미스의 비버와 노루 이야기는 역사적이거나 분석적인 어떤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체제가 도덕적으로 만족스러울만한 목가적인 과거에 사냥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교환이나 가격, 가치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관점(moral pre-conception)을 제시한 것이다. 즉 가치라는 개념은 올바른 교환이 존재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추상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나아가서 조금 더 복잡한 사회를 가정한다. 즉 토지가 대지주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자본이 소수의 사람에게 축적되자마자,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근면한 사람들을 일하도록 하는데 그 자본을 사용하고, 그들의 노동을 팔아서 혹은 그들의 노동을 재료의 가치에 덧붙인 것에 의해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들(자본을 소유한 사람)은 재료와 subsistence를 공급한다.(The wealth of nation vii.1 pp.44 and 42, Robinson 29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담스미스는 여전히 비슷한 관점을 사용하여 가치에 따르는 자연비율을 자연가격이라는 것으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본다.

"임금과 이익 그리고 지대라는 어떤 통상적인 혹은 평균적인 비율이 사회나 이웃공동체에 있다. . . . 이러한 통상적인 혹은 평균적인 비율은 임금과 이익, 지대의 자연적 비율이라고 일컫는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이러한 자연비율을 지불할 때, 상품은 자연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팔리는 것이다. 그 상품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에 따라 팔리는 것이다. (ibid., p.48, Robinson, p. 30에서 재인용)

물론 가격이론으로서 위의 진술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가격의 제안은 가격이 본래 의미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비록 오늘날에 가르쳐지는 사상

(doctrine)이 아무리 정교하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의 통찰력(penetrating)을 제공 할지는 의심스럽다.(Robinson, 30)

자연가격이 이 자연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자연 비율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상품 생산에 기여한 각 성분들의 적절한 비율에 의해 자연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이 자연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 비록 시장의 가격이 자연가격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자연가격으로 가야 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자연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치 척도란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가치 척도가 없으면, 이 자연가치를 누가 결정하고, 상품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선(good)"을 측정하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은 조소한다. 그 가치를 실증적으로 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는 최소한 가치의 존재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시장가격이 너무 이 가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즉 가격을 보고 지나치게 그 상품이 지녀야 할 가치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보다, 가치 개념을 살려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 지상의 생산품 - 노동, 기계, 자본의 통합적 적용에 의해 파생되는 모든 것은 공동체의 세 계급에 분배된다. 즉 그러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자, 스톡 혹은 자본의 소유자, 그리고 실재적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된다. 지대, 이익, 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인류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이 세 계급에 분배되는 분배의 비율은, 토양의 현실적 비옥성, 자본과 인구의 축적 그리고 숙련기술, 천재적 독창성 그리고 농업에 투입되는 도구들에 주로 의존하면서, 시대마다 본질적으로 달랐다. 이러한 분배를 규정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주요 문제이다.”(Works of David Ricardo, ed. P. Sraffa, vol. I, Preface to the Principles, P. 5. Robinson 31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배를 결정하는 법칙도 가치라는 개념을 살려두면, 그 법칙의 발견을 인도하는데 주요한 직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각 성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점 혹은 그것을 향하는 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가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비록 가치의 완벽한 측정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가치의 척도가 되는 하나의 상품을 발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길이의 척도를 원할 때, 우리는 야드나 피트를 선택한다. 그것은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어떤 결정된 명확한 길이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의 척도를 원할 때, 우리가 가치를 가지면서 가치에서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가?(ibid., Vol. iv, p.361, Robinson, 31에서 재인용) 우리가 야드나 피트를 설사 정하기 위해 관찰 가능한 표준 자를 만들어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도와 기압 등에 따라 기준치도 변한다. 자연 과학에서도 불변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로빈슨의 유티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가치는 측정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말 뿐이라는 로빈슨은 비판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 가치를 다루는 이론을 만들면 여전히 가치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론이 어떠해야 할 지는 미지수이다.

3. 시장의 한계와 전제: 아담스미스의 보편도덕

아담스미스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 무엇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또는 이 시장가격이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시장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다. 아담스미스는 자연가치와 자연가격을 이야기 했다. 물론 아담스미스는 단순한 상황을 설정하여 이야기 한 것이지만, 교환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것이 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인데, 그 시장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배경조건을 가진 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시장에서 얻어지는 가격이란 정당한 가격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아담스미스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근대처럼 생산력이 증대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는 그 이유를 “. . . 특권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중세 봉건 사회의 특수 도덕을 타파하고 보편도덕에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윤원근, 박영신 1999, “동양의 사회학: 선한 사회의 조건에 대한 탐구”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p. 55) 이 보편도덕의 진전으로, “. . . 자유 시장은 평화스러운 교환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의 마당이 될 수 있다.”(ibid.) 그리하여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당인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개인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활동한다는 모델을 가지고 모든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enneth Arrow(애로우)는 수학적으로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적절한 가정을 이용하여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기업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균형가격이 단 하나 존재함을 증명했다. 이것은 소위 아담스미스의 은유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수학에서는 완전경쟁 상황으로 상품량, 가격의 변화, 임금의 변화는 연속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들을 함수로 보면 smoothing function이다. 장애물이 있어 가격의 변화를 막는 즉 가격 공간에서 울퉁불퉁한 장벽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스미스의 시장개념에 가까운 가정이다.

아담스미스는 시장을 선한 사회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의의 보편도덕을 시장작동의 기본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사회관과 관련이 있다. 아담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가인데, 계몽사상가들의 사회관은 ‘사회적 사실’을 중시했다. “그들은 사회의 관습을 루소의 일반의지와 비슷한 집합 의식으로 형이상학화 하지도 않았고, 도 사회사실을 도덕사실과 동일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존재로 보면서 인간의 ‘사회성’을 설명하는 보편스런 도덕원리를 확립하려 하였다.”(ibid., 43) 스코틀랜드의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은 물리세계와 마찬가지로 일정하므로, 보편적인 자연질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편도덕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영위되는 사회세계도 자연세계처럼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두 질서는 서로 받쳐준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계몽주의자들은 선한사회가 가능하며 그 사회는 바로 인간의 일반 본성에 일치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회가 인간 본성에 일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본성은 무엇인가?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도덕 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이를 잘 기술하고 있다. 그 책의 핵심은 동감(sympathy)이다.

윤원근, 박영신은 그들의 “동감의 사회학”이란 논문에서 스미스의 동감의 사회학은 계몽주의자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던 사회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 형태를 드러내었다고 한다.

스미스는 인간 사회의 바탕이 되는 도덕의 유형은 특수도덕과 보편도덕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차이는 도덕규범의 내용이 교섭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자들에게 차별하여 적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다. 특수 도덕은 특별한 대상에만 적용된다. 반면에 보편도덕은 모든 대상에게 적용된다. 이 두 도덕은 전연 다른 방식으로 인간 관계를 규정한다.(윤원근, 박영신)

“...시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자는 정의의 보편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시장의 배경조건이다. 이기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이기심의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도 이 보편도덕의 준수를 전제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보편도덕을 여기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상인과 제조업자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윤원근, 박영신)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항상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이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종종 사회의 이익에 합당할 수 있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 이익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경쟁을 제한하면, 상인과 제조업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류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세금(예 상품의 가격인상)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윤은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이 제한하는 어떤 새로운 상업적 법률 규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며, 매우 진지하고 주의 깊게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채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안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정확히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계급, 그리고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국부론 상 p. 254, 윤원근에서 재인용)

아담스미스가 정부의 개입을 무조건 부정하고 반대하는 자유 방임론자, 시장만능주의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묘사다. 아담스미스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시장개입은 대체로 상인과 제조업자들과 일부 사람에게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교란시키고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고, 시장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부보다 더 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의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지역적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거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어리석다.(윤원근, 박영신)

아담스미스는 보편도덕을 여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에서 구성원이 보편도덕을 준수하도록 그 실천이 확립되어야 시장에서 교환되는 가격체계는 자연가격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편도덕의 준수를 시장참여자의 전제조건으로 본다면, 시장은 사실상 신뢰와 기대의 시스템인 셈이다. 왜냐하면 분업사회에서는 시장참여자의 지식은 상품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상품에 대한 허위정보를 가지게 될 경우가 많고, 거래 계약을 신뢰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교환이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신의 행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기 힘들어 시장행위는 극도로 제한되고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찮다. 이처럼 기대와 신뢰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현대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시장은 비효율에 빠지는 것이다.

시장주의자로서 아담 스미는 시장 참여자들이 보편도덕을 준수하면 시장은 기대와 신뢰 시스템으로 되고, 이 시장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축복인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윤원근, 박영신, 참조)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의 실패가 파시즘의 대두와 같은 서구의 비극을 낳았다는 것은 경청할만하다. 이것을 아담스미스의 사상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보편도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당시 사회적 격동기에는 그것이 힘들고, 정부가 개입하여 독점, 결탁 가격왜곡 등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역할에 실패하고 오히려 동조한 셈이다. 여기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실패라기 보다는 정부나 지배계급이 권력을 통한 착취로 보편도덕 확립에의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은 보편도덕까지 조절할 수 없다. 보편도덕의 준수는 시장의 한계이다.

보편도덕의 준수가 시장의 한계인데, 정부는 시장 참여자이면서 시장에 개입하여 보편도덕의 위반을 감시해야 한다. 그 감시 대상은 정의 도덕의 준수이다. 아담스미스는 보편도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정의의 보편도덕이며 다른 하나는 자해의 보편도덕이다. 정의의 보편도덕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정의의 보편도덕 못지않게 중요한 자해의 보편도덕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인간 사회의 중요한 덕목은 정의와 자해이고, 훌륭한 시민이면 정의와 자해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자해의 도덕을 산출하지 않는다. 자해의 도덕은 시장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타인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스스로를 위해 조금밖에 느끼지 않으며,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우리의 이타적인 성향은 방임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류의 품위를 높이고, 행위의 적절성을 부여하는 감정과 정열의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법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위대한 계율이다.(도덕 감정론 p. 56, 윤원근 박영신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을 아담스미스는 동감이라는 용어로 묘사한다. 동감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다.

4. 경제학의 두 얼굴: 실증성과 규범성

프리드만에 의하면 “실증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관찰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정당하고 의미 있는 예측을 만들어 내는 이론 혹은 가설의 개발이다.”(M. Friedman,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The philosophy of economics』, p.148, Daniel Hausmann(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originally 1953 i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Press)

그에 의하면 이 이론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추론 방법을 구성하기 위한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현실의 본질적 특징을 추상화시키기 위하여 의

도된 본질적인(substantive) 가설의 체계이다.(Ibid) 이 두 요소는 그렇게 구별할 수 없지만, 프리드만은 구별한다. 경제학을 실증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연히 경제학의 임무는 설명이고 그 설명은 곧 예측이다.

이 사상의 전제는 사회현상을 우리와 독립적인 객관적 사실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 독립적인 현상의 의미는 비록 경제현상이 우리 인간의 행위, 아이디어, 또는 이론 의존적이거나 하더라도 경제현상에 어떤 변화가 올 때, 변화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탐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요약하면 행위자와 경제현상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인과적으로 분석해 내어 우리의 영향과 경제현상의 움직임을 분리해 내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경제학의 과제이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경제학은 훌륭한 과학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은 마치 물리학이 자연이 객관적으로 관찰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시장을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바라본다. 비록 시장의 구성원이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은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할 지라도!

주류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하고 있다.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시장을 객관적으로 취급할 수 있고, 또한 독점이 있더라도 그 독점의 문제를 파악하여 변화시키려 한다면, 경제현상의 메커니즘을 원리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관찰자와 대상이 상호작용하더라도 대상을 객관적 존재로 보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과학성이다. 이러한 관점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선형적으로 알 수 없다. 경험적 성공으로만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현대 경제학은 이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면, 고도의 번영사회에서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한 사회에서 보 원칙적으로 진화경제학이나 신경경제학이나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이는 경험과학의 대상으로서의 경제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모델이나, 법칙모델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사회는 구성원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회는 주어진 것이고 인과적 작용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사회과학은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있다는 것, 아니 사회과학의 목적은 이해 해석이란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해와 설명의 논쟁이다. 필자는 설명과 이해를 상보적으로 사회과학은 과학으로서의 예측과 통제가 필요하지만, 의도를 가진 구성원을 의미 있는 행위가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은 기술 방식에 의해 동일한 현상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사회과학은 의미해석, 이해를 다루어야 하며 법칙이나 인과모델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게다가 경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쿤의 사회구성주의나 실재론적 과학철학이 보여준 것 중의 중요한 요소가 경험적 증거로서의 관찰 결과는 이론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현존하는 시장경제에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관찰결과를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찰 데이터가 이론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 의존적이거나, 시장주의적 현대경제학은 관찰 데이터의 선정과 데이터의 해석이 자신의 철학에 맞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려는 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관점에 맞도록 현실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주장자가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제학이 보편도덕이 이루어져야 시장이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균형이론은 도덕과 착취, 평등의 문제와 같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의란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경제학이 신고전파이론을 개선하여 케인즈 경제학, 진화경제학, 실험경제학, 합리적 기대이론, 신제도 학파 경제학, 등의 여러 개선책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전파의 기본 모델인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불확실성과, 신뢰의 부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개인적인 최선의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최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할 때 사회전체의 효율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렇다면 규범성을 강조하고, 보편도덕 준수를 위한 노력이 혁신, 인력 양성, 투자보다도 훨씬 나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면, 경제학은 과학성과 규범성 모두를 필요로 하는 학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물신숭배로 가고 있다. 경제학은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에 대한 삶에서는 가치나 윤리나, 정의, 불평등, 착취, 물신숭배는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의 의사 결정 패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이들을 다루지 못하고 경제현상의 주요문제가 아닌 한 불편한 부산물로 보고 있다. 현대 경제학의 관점이 실증과학으로서 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관점만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사회가 물신숭배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동시에 이 물신숭배는 우리 인간을 비인간적인 도구도 만든다. 관찰이 이론 의존적인데, 물신숭배로 가는 가치관이나 형이상학을 인정하면 관찰을 위한 변수의 선택과 관찰결과의 해석은 자연히 인간을 철저히 물신 숭배 사회에서의 도구로 인정하는 전제에 합당한 관찰이론을 만들고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규범성을 실증성과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물론 안된다. 경제에서는 부의 총량은 가변적이다. 경제현상을 실증과학의 대상이라고 보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에 어떤 강제를 하는 것은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분배할 파이를 줄인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 강제가 빈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시행한다고 해보자. 윤리적으로는 비인간적인 저임금으로 국민이 빈곤을 겪는데 이 최저 임금은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켜 고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기업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파산하여 실업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빈곤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윤리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문제이다. 규범성과 실증성은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규범성이 없으면 최저 임금제조차도 알 수도 없고, 인간다운 삶으로 사회가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기업에는 이익은 되지만, 정치 사회의 윤리와 정신이 파괴되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규범성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현실 경제의 구성원은 사람이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분배가 되는데, 그리고 사회가 그 시장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람이 있다. 이것이 현실경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히 정부나 경제행위를 하는 구성원이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 할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성취

하려는 노력의 목표, 성취동기, 방법 등은 규범적 요소로 작용한다. 즉 가치관, 사회를 보는 철학, 분배에 대한 이데올로기, 방법론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 정부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입에 대한 철학적 배경 등이 작용하는데 이는 규범적 요소이다.

이 규범적 요소를 적용할 때 경제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는 경제학이 지니는 실증적 과학에 의존한다. 동시에 그 실증성이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가라는 판단에는 규범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학은 규범성과 과학성을 다 가지고 있다. 가치의 고려는 이 규범성을 반영해주는 태도이라고 생각한다.

5.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에 대해 윤리적이고 경제학적인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철학적 정치적 비판을 할 수가 있다. 시장의 작동은 항상 전제가 있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왜곡되는지 아닌지 혹은 이러한 전제에 모순적인 조건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그것을 숨긴다고 하는 것 등에 대한 비판은 항상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경제학에서 나오기 보다는 철학이나, 윤리학, 정치학 등에서 나온다. 경제학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쿤의 주장처럼 학문공동체가 그러한 연구를 정상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연구 패러다임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사용하되 오직 실증 과학적 추론만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규범성을 다루는 정치경제학은 비주류로 거기서 얻은 결론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institution)은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 대학, 병원, 교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각 기관들이 이런 고상한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고상하지 못한 목적을 추구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이 정하는 고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기도 하여 궁극적으로는 고상한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더 슬픈 사실은 인류의 특정그룹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수단으로 자신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배중석, "자베르를 넘어서"를 참조 서울 중앙교회 계시판)

배교수의 이런 사상이 바로 기독교 관점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실 설명의 성공을 강조하여 현실의 현상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의한 측정방식, 결과 해석 장치를 만들어 버리면, 자연히 이러한 규범적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상관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슬픈 사실이 일어나도 시장의 작동에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으로 현실을 정당화하는 경제학적 주장은 잘못이 아닌가? 경제학자의 호모에코노미쿠스의 가정은 어떤 면은 성공적인 가설로 자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실패가 있는데, 그것은 애써 보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적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바뀌고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경제현상을 인간적 경제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지 않을까?

시장 가격은 그 상품(노동을 포함하여)의 가치에 일치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사상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가치 개념을 형이상학적으로 치부하고 따라서 시장가격은 항상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이나, 윤리는 해야하는 것을 다루는데 그것은 측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선함과 윤리적 당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에 대한 숙고와 이론적 논구는 우리의 시장경제를 보는 비판적 디딤돌로서 필요한 것이다.

맑스주의자처럼 이윤을 모두 노동으로 환원하려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가치의 핵심으로 보지 않고서도 가치와 가격의 비교 개념은 현실 가격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가치를 실증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측정할 수 없지만, 경제 윤리, 경제사상, 정의론 등의 학문으로 규범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가치개념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의 용어를 빌리면, 이상화된(idealized) 조건 속에서는 가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현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 그 지표에 비추어서 우리는 가격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기독교 관점은 형이상학적 관점이다. 즉 과학에서는 검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이다. 그러나 과학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는 이 형이상학적 관점에 의해서 분석되고 해석된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관점을 과학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것을 부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우리 사회가 만드는 학문이나, 제도, 교육, 이론, 기관 등은 모두 인간의 자아를 실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장단기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둘째는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의무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 있다는 낙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적 용어를 도입하면,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모습에 가까이 하는 것과 성령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창의성은 몰두가 필요하지만, 빠져서는 안된다. 상품의 가격을 넘어서서 본래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형이상학적 관심과 연결되어 언제든지 외부적 입장을 갖게 하여, 추상적 세계(abstract world)와 이상화 세계(idealized world)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 시각은 바로 창의성과 독창성을 일으키도록, 주류 경제학에 대해 자극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경제학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한 부분이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는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의 추구해야할 중요한 주제 이면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주제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경제학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가격이 가치와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즉 현재 가격이 과연 정당한 가격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항상 가치를 반영 못하는 거대한 왜곡된 분배 및 생산 구조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반성하며 고통받는 자들은 우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구조를 개선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윤리적 자극이며, 우리의 모든 기관은 여전히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